

제1편 경제법 총론

제1장 경제법의 형성배경

0 시민사회의 성립 : 세습적 신분제와 토지에 근거한 봉건제 타파.

- 개인주의 · 자유주의

0 시민법 질서의 기본원리 : 법인격의 평등 -> 사적자치 / 소유권 절대 / 과실책임

- 시민사회와 국가의 엄격한 구별 : 공 · 사법의 구별

-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, 재판(야경국가)

->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 금지(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 : 보이지 않는 손)

0 자본주의의 고도화

- 시장의 독점화 : 공황발생(시장실패)

-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경제적 지배 성립(경제적 계급제) : 사회주의 이념 진파

->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 위협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

=> 경제법은 자본주의경제의 일정한 발전단계의 법으로서 파악

=> 경제법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회피하고, 경제적 · 사회적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발생한 경제정책적 입법의 총체.

제2장 경제법의 의의

- 경제법이라는 용어는 제1차대전후 독일에서 처음 사용

* 미국에서는 경제법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, 반독점법(Antitrust Law)과 경제규제(Regulation of Economy)로 구성.

0 경제법은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국가가 경제를 규제하는 법규범과 법제도의 총체로 이해

- 정당한 경제질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이념적으로는 사회적 정의와 안전을 지향하는 경제질서를 의미

-> 사회적 시장경제 : 사유재산제 보장 / 시장경제 / 사회조화(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)

제3장 경제법과 다른 법의 관계

1. 헌법과 경제법

헌법 제119조 :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,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,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고 규정

-> 경제법의 성립가능성과 그 기본적인 내용과 형식 및 제한의 한도 등을 규정

- 경제적 자유주의 원리 : 시장경제
- 사회국가 원리 : 시장실패 대처(사회간접자본, 공공재, 소외자 구제)
- 법치주의 원리 : 합법성, 보충성, 평등원칙, 비례성(적합성, 필요성/최소침해, 비례성)

2. 행정법과 경제법

-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
-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 : 국가의 간섭 - 소극적 간섭(권리제한) / 적극적 간섭(보호육성)

3. 민법·상법과 경제법

- 민법은 개인의 법률관계를 규율 : 소유권과 계약
- 상법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
- 경제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와 조정

제2편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

제1장 총 설

- 0 자본주의경제의 기본 -> 시장기구 : 경쟁
 - > 독과점은 독점가격에 따른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가져옴
- 0 독점규제법은 독과점 시장구조 · 경쟁제한적인 기업행동을 규제
 - > (시장에서의)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시키려는 법률

제1절 국내 입법의 경제 · 사회적 배경

- 지난 시기 우리는 불균형 성장이론에 근거한 경제개발전략을 채택하여,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, 독과점의 심화 · 시장기능의 왜곡(정부의 인허가정책, 가격관리정책 등)이라는 문제점 노출
-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, 특정인 또는 특정 집안에 의해 지배되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문제 -> 재벌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, 비관련사업의 다각화,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

제2절 입법화 과정

1. 1966년의 공정거래법안

- 성립배경 : 1963년 ‘三粉폭리사건’을 계기로 독과점이 사회문제화 됨
- 이후 1969년 신진자동차공업(주)의 폭리문제로 독과점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독점규제법 제정논의가 있었으나 입법화실패.

2.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- 입법취지 : 오일 쇼크로 인한 물가 상승의 억제 필요
- 주요내용 : 물가상승이 원재료 가격상승 이외에도 ‘독과점적 시장구조’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아 공정거래에 관한 입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짐(최초의 입법)
- 단기간의 물가안정에 치중함으로써,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접근이 부족.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,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냄.
-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공정거래에 관한 부분은 1980년 독점규제법이 제

정되면서 삭제되었고, 법의 명칭도 1995년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.

3. 독점규제법의 제정과 개정

(1) 독점규제법의 제정

·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의 부작용을 인식하고, 경제운용의 기본방식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모색.

· 민간주도의 경제운용방식은 결국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의미하며,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독점규제법의 제정 필요성의 대두

·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어,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

(2) 독점규제법의 개정

1) 제1차 개정(1986년)

- 경제력집중 억제 신설 : ① 지주회사의 설립금지, ②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, ③ 출자총액의 제한(순자산의 40%)

2) 제2차 개정(1990년)

-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승격하여 시행기관

3) 제6차 개정(1997년)

- 국제통화기금(IMF)의 요구인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의 실현을 위하여 개정 :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제도 전면금지

*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

4) 제8차 개정(1999년 12월)

- <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개선> :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

5) 2009년 개정

-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